

미래 도약을 위한 든실한 복지국가

보건복지부가 국민과 동행합니다

“나라를 단단하게, 국민을 든든하게”



2023년 보건복지부 핵심 동행 과제

- 

01
충충하고 두터운
약자복지 확대
- 

02
생명·건강 지키는
필수의로 강화
- 

03
지속가능한
복지개혁 추진
- 

04
보다 나은
미래 준비

충충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

충충한 위기가구 발굴

-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합니다.
- 위기정보 입수 시 시 활용 초기상담(시범운영, 2023년 하반기)
- 질병, 채무, 고용단절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(39종 → 44종), 기관 간 발굴대상자 연락처 연계(2023년 하반기)

두터운 취약계층 보호

-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.
-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5.47% 인상(2023년 1월~)
 - (생계급여 최대급여액) 1인가구 58만 원 → 62만 원, 4인가구 154만 원 → 162만 원

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을 강화합니다.

- 통합돌봄 시범사업(2022년~), 긴급돌봄 시범사업(2023년 4월~),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(2023년 1월~)
- 장애인연금 인상(월 최대 약 38.8만 원 → 약 40.3만 원), 장애수당(월 4만 원 → 6만 원),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(2023년)

새로운 복지수요 대응

- 사각지대 청년 발굴을 확대하고 지원을 다각화합니다.
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월 35만 원 → 월 40만 원	자립정착금(저자세 권고) 800만 원 → 1,000만 원	가족돌봄청년 맞춤 통합서비스 신설 가사, 간병, 병원동행 등 시범사업(2023년)
청년내일저축계좌 대폭 확대 2022년 4.2만 명 → 2023년 11.9만 명	마음건강지원서비스 바우처 지급 2023년 1.5만 명	

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계획을 마련합니다.(2023년 3월)

- 최근 5년 실태조사 분석, 예방 시범사업(2022년 8월 ~ 2023년 12월)

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고도화

- 중산층까지 이용 확대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본인부담 차등화, 융합 돌봄 모형 개발, 특새돌봄, 생활형 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 보완
-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(2023년 140억 원)

생명·건강 지키는 필수의로 강화

보건의료에서도 약자복지 실현

-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·응급·분만,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를 강화합니다.
- 공공정착수가 등 보상강화, 지역·과목간 불균형 해소 등

필수의로 기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.

- 지역별 병상수급계획, 전문의 중심 인력 체계 개편, 지역안결·진료역량 강화,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

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

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

-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고, 재정 누수를 방지합니다. 「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대책」, 2023년 1월

 <p>보장성강화 항목 등 재점검</p>	 <p>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</p>
 <p>합리적 의료이용 유도</p>	 <p>불법행위 엄단·비급여 관리 등</p>

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을 개혁합니다. 「건강보험통합계획」, 2023년 하반기

- 수가 정상화
- 중증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
-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등

상생의 국민연금 개혁

-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“국민의 연금개혁안”을 마련합니다.

재정추계 발표 (2023년 1월) → 의견수렴 (FG, 간담회, 대국민 토론회 등) → '중합운영계획' 국회제출 (~2023년 10월)

보다 나은 미래 준비

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

(기준) 저출산 대응 중심 (확대) 초고령사회 진입,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및 부분별 적용방안 마련

2023년 상반기 아젠다 발굴, 하반기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

저출산 완화 위한 일·육아 병행 지원

- 출산·양육초기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.
 - 소득보장을 위한 부모급여 지급 (2023년 1월~, <0세> 월 70만 원 / <1세> 35만 원)
 - 어린이집 활용해 육아교실 등 운영하는 육아일표 시범사업(60개소)
 - 시간제보육 인력확대 (2023년 1,030개반 → 2024년 이후 읍면동별 1개소 이상 목표)

보육서비스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합니다.

- 보육교직원 인력지원·권리보호, 국공립 확충 등 국가책임 강화 추진

천만 노인 시대, 전방위적 대비

- ‘살던 곳에서의 노후’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합니다.

2022년 28개소 → 2026년 80개소
 재가수급자에게 방문진료·간호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대

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2023년 하반기

의료-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, 2023년 3월~

통합재가서비스 확대 31개소 → 50개소

노인친화형 공동주택(가정) 거주방안 마련

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

- 필수백신 국산화(2,151억, ~ 2029년), mRNA백신(210억, ~2023년) 등
- 의료·건강정보 연계 ‘건강정보 고속도로’ 본격 개통(2023년 상반기)
- 100만 명 임상·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및 암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시행

바이오헬스 육성·수출 총력 지원

- 생산·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 수립 (2023년 상반기)
-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, 신의료기술평가유예 확대 추진
- 국내·외 백신·원부자재 기업간 파트너십 촉진
- 제약·의료기기 R&D 확대 및 K-바이오 펀드 투자 개시, 전략적 수출지원